

터키에는 터키탕이 없다?

최근 케이블방송 A채널 토크쇼에 출연한 게스트(터키국적)가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터키탕에 대해 언급하였다. “남녀 혼탕 문화를 한국이 일본에서 들여와 터키탕으로 만들었는데 터키 대사관에서 항의를 해서 그 이름이 없어졌다고 하더라” 이 게스트의 말은 맞는 말이다. 1996년 데리야 덩겔테페 터키 대리대사가 우리나라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그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터키탕이 사라지고 증기탕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터키대사관은 우리나라 터키탕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던 것일까?

1996년 7월 어느날 교회여성연합회로부터 도움 요청이 왔다. 내용인즉슨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관광호텔에 이성입욕자를 고용할 수가 있고, 이 내용을 근거로 이성 마사지사들이 고용되어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을 ‘터키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교회여성연합의 말을 들은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1996년 7월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에 전화를 걸었다. “터키에 있는 터키탕도 한국처럼 이성입욕보조자가 함께 있는지? 그리고 이성입욕자와 성매매를 하는지?” 문의를 하였다. 우리의 질문에 외대 교수는 펄쩍 뛴다. “아니다. 터키탕은 그냥 순수 사우나”라고 답했다. 외대 교수의 답변에 확신을 가진 우리 단체는 그 다음 행동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하다가 터키 대사관에 터키탕 영업방식과 터키라는 국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터키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연상시키는지에 대해 알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터키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한국에 터키탕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그 곳에서 성매매가 일어난다. 터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냐?”라고 질의하였다. 우리 단체의 질의에 대해 터키 대사관은 매우 놀랐으며, 다음날인 7월 우리나라 관계기관과 통화한 터키 대사관 데리야 덩겔테페 대사는 ‘터키탕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독자투고를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에 ‘터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터키탕 명칭 사용변경 서한을 보내게 되었다.

한달 뒤인 8월 7일 한국 정부는 ‘관광호텔에 마사지걸을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1997년 2월 11일 공중위생법상 특수목욕장업의 하나로 인정돼 온 터키탕업이 본래의 건전한 터키식 목욕장과 다르게 운영돼 왔고 이에 대한 터키정부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고려해 그 명칭을 증기탕업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로소 ‘터키탕’이 ‘증기탕’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내일여성센타의 전략이 매우 시의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 * 터키탕의 유래

터키탕의 말뿌리를 더듬어 오르면 일본 동경의 변화가 긴자에서 제일 큰 동경온천에 귀결된다. 1951년에 그 온천 널따란 대중탕 곁에 칸을 막은 객실들을 만들어 한층막을 만든 것이다. 그 칸막이탕을 터키탕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 같은 업종의 고유명사로 정착해버린 것이다

증기탕 또는 **터키탕**은 성매매 형태의 하나로 주로 남성 고객이 윤락 여성을 목욕 동반자로 지정하여 목욕을 하며 마사지를 받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여성이 알몸으로 남성의 몸을 타며 애무를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1996년 한국의 호텔을 중심으로 약 116개 업소가 성행을 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증기탕은 불법이다. 소수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증기탕도 있다

<터키탕이 퇴폐업소로 된 이유>

증기탕 입욕보조여성 금지... 퇴폐영업 '철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증기탕에 이성 입욕보조자(입욕보조여성)의 입장을 금지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현재 증기탕은 관광호텔내에서만도 서울의 관광호텔 내 업소 28개소를 비롯해 전국에 160개가 영업 중이며 여성입욕보조자들은 2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증기탕은 지난 60년대초 외국 관광객 유치로 목적으로 때밀이, 안마 등 목욕장업으로 출발했으나, 88년 올림픽이후 퇴폐이발소 등 퇴폐업소가 양산되면서 존폐위기를 맞자 현재와 같은 퇴폐업소로 바뀌었다. <한겨레 1998-08-18 >